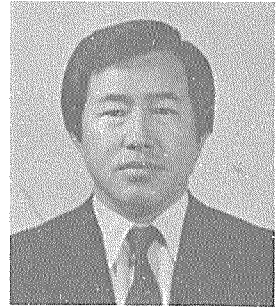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심명기 / 본회 비상근 이사
(주) 한독 사장

한강에 정치인, 기업인, 성직자 세 사람이 빠졌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치인이 정답이고 그 이유는 한강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만큼 요즈음 정치에 대한 불신이 낮게 깔려 있는 것 같다.

며칠 전 어느 경제장관의 조찬 강연회에서도 강연이 끝나고 질문하는 순서에서 한 참석자가 요즈음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난은 정부당국이 경제문제를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풀려고 하지 않고 정치논리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 아니냐고 아픈 곳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는 분위기였다.

'88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바로 눈앞에 다가 온듯이 들떠 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지금은 무역자가 120억불을 넘나들고 이대로 가다가는 남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요즘처럼 취약하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최근 3년사이에 두배나 오른 인건비의 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6.29

이후 민주화라는 기치하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임금투쟁을 치의 법권적으로 방치한 결과이며,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나라와 최대 경쟁상대국인 대만의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이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 갈려고 해도 힘겨운 일본의 경우가 46시간인데도 우리나라 국회가 44시간으로 적법화한 것을 보면 경제가 정치의 희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 탄식도 나올 법하다.

일하는 시간이 남보다 적고 임금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기술개발을 잘 하고 생산성을 올려서 이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기업을 질책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경제논리를 도외시한 정치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제현상이란 사계절이 바뀌듯이 일정한 법칙과 순리가 있기 마련인데 우물가에서 승냥찾는 식의 접근으로는 경제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처에서 발견하고 있다.

주택 200만호 건설만 해도 공급물량절대부족이라는 주택문제를 공급확대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제논리적 접근은 일단 좋았지만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제반 생산요소의 균형적인 적기 배합

을 주도면밀하게 따지는 경제인의 시각보다도 공약을 이행했다는 정치적 평가를 듣기 위한 조기달성의 수행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는가를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토지 공개념의 도입도 그 실시 과정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중토세의 부과로 불안불급한 건축공사가 폭주하는 바람에 각종 노임과 건축자재가의 앙등으로 인플레이를 유발한 역작용도 따지고 보면 토지공개념이라는 정치논리가 개인의 이윤추구라는 경제논리의 강도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에 상정된 법안중에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과세감면 철폐와 같이 과거 정부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약속했던 인센티브를 소급하여 회수하는 식의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뿐 아니라 소급입법 불가라는 상식논리마저 뒤 덮으려고 하는 판이니 일반인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의 골이 쉽사리 없어질 것 같지 않아서 다음에는 또 어떤 정치불신에 관한 우스갯소리가 나돌지 걱정이 된다.